

대법원 2018도5184

함양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8. 6. 15. 함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함양군수가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5184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임창호¹⁾는 2013년 재선거 및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함양군수에 당선되었음
-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6. 5. 17.경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행정과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함양군의회 의장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음

■ 원심의 판단 : 유죄

- 피고인이 관례대로 찬조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다음 군의회 의장실에 찾아가 부군수 등의 봉투와는 달리 직명 등 아무런 기재가 없는 봉투(일명 '백봉투')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행정과장을 통해 또는 자신이 직접 군의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을 기부행위자

1) 피고인은 현재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

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용도, 최종적인 귀속 주체 등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군의회 의장에게 전달하였고, 군의회 의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군의회 의장을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군수로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이 사건 찬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기부행위의 경위, 목적, 대상,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인 해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찬조금은 함양군청 행정과 공동경비, 함양군청 실과소장협의회비에서 조성되어 출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인데도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군의회 의원 10명 전부의 비용을 찬조한다는 의사로 군의회 의장에게 지급하였는데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군의회 의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행이라는 보고를 받고 관행대로 지급한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 또는 직무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 관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군청 직원들이 조성한 금원에서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 비용을 보전해줄 목적으로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임